

【W3-2】

2004년도 식약청의 식품영양정책 방향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과장

1. 식약청 식품영양정책의 기본 방향

식약청은 전향적이며, 예방 중심적인 식품의약품의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8년에 설립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약생활 보장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의 설립 당시 식품분야에서 각종 식품위생 사건·사고가 잦아 식약청은 그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았던 영양관련 정책사업은 긴급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낮아 식약청의 주요정책과제로서 채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속속 밝혀짐에 따라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발생 등 영양위해요인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영양 및 기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식품영양정보를 얻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영양표시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WHO에서는 다이어트 국제기준을 만드는 등 국제적으로도 식생활과 영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식생활 안전관리의 주관부서인 식약청은 국민들이 위생적·영양적으로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또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식약청 식품영양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가적 차원

의 식품영양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제반 정책기준 마련에 두고자 한다. 또한 국가가 어렵게 마련한 정책기준이 단지 경직된 규정으로 사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자신의 식생활 개선에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식품영양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

2. 2004년도 식품영양평가사업의 추진 방향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2004년에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품영양 정책과 관련한 R&D 사업인 “식품영양평가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식품영양평가사업”은 영양평가과에서 2004년에 신규로 수행하는 정책사업으로, 식약청의 식품영양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과제를 조금씩이나마 시작할 수 있도록 골고루 구성하였다. 그 내용을 과제 목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 1> 2004년도 식품영양평가사업의 분야별 추진 내용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2004년도 추진 내용
식품영양정책 관련 제반 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사업	< 영양표시정책 분야 > - 영양표시기준 개선 및 모니터링 - 영양표시의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 식품참고량 및 1회분량 설정 연구 <영양강화기준 분야> - 일반식품의 영양강화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특수영양식품 관리 분야> - 환자용식품 기준 및 규격 개선사업 - 영·유아용식품의 영양·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공정별 권고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식품영양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 한국인을 위한 영양섭취기준(DRI)개발체계 구축 및 식품정책에의 도입방안 연구
식품영양평가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	- 식품성분 코드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 식품 중 셀레늄 분석 연구 및 모니터링
식품영양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양교육 및 영양정보전달 체계 마련 연구
기타정책사업	-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영양분야 업무 개발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

첫째, 식품영양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지침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 사업에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기준 및 영양강화기준, 그리고 영양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영양식품의 기준·규격 및 지침마련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일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몇가지 영양성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영양표시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2004년에는 영양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산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의 영양강화정책도 영양표시정책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식품영양평가를 토대로 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식품의 가공과정에서 손실된 영양소를 보강하거나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에 영양소를 첨가하였던 것이, 최근에는 결핍예방의 목적보다는 건강에 유익한 성분의 섭취를 증가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양소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영양강화는 오히려 영양과잉을 초래하여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 식생활에 기초한 영양강화정책을 기초로 한 영양강화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2004년에는 일반식품의 영양강화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영양강화기준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영양강화기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영양평가과에서는 영·유아, 임신·수유부, 환자 등 특정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영양식품의 기준규격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은 섭취대상이 건강 취약집단인 만큼 일반 식품에 비하여 보다 철저한 영양품질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2004년에는 현행 기준규격의 정비가 시급한 환자용식품의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기반 연구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영·유아용 식품의 영양·품질 및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반 연구를 통하여 제조공정별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제조업소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국민의 영양조사, 분석자료 등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학에

근거한 식품영양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품영양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영양평가 및 식품안전정책의 기본이 되는 영양섭취기준(DRI: Dietary Reference Intake)이 설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영양결핍이 문제가 되었으나 현대로 올수록 영양결핍과 과잉이 공존하는 영양불균형이 국민 영양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영양정책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영양결핍증 예방을 위주로 책정이 되어 온 영양권장량보다는 평균필요량, 영양권장량, 적정섭취량, 최대허용량과 같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 개념의 영양섭취기준이 중점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004년도에는 영양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국가적 체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식품정책 활용에의 도입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며 향후 영양소별, 연령별, 성별 기준 제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세째, 식품영양평가를 비롯한 제반 식품영양관련 정책 기준 마련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식품성분 분석 자료 및 식품섭취량 조사 자료 등의 국가적 차원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식품성분 데이터는 국가의 식량·영양정책 수립, 국민 영양조사를 통한 영양상태 판정, 임상·역학 연구 및 환자관리와 급식 관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된 식품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분석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identity 불분명, 식품코드분류 체계의 상이함 등을 인하여 영양평가 뿐만 아니라 식품위해평가 등 다른 분야의 정책 활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 및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상호교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데이터뱅크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2004년에는 우선적으로 식품성분 데이터뱅크 구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청 수입식품전산망과 식품공전의 원재료 분류 등을 기초로 하여 식품성분 분류체계 및 코드표준화(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합리적인 식품분류체계를 통한 코드표준화(안)이 마련되면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직까지 기초자료 확보가 미흡한 미량영양성분(셀레늄 등)에 대한 분석·모니터링을 통하여 식품영양평가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보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국가적차원의 식품영양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식생활과 건강간의 상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과 관련한 각종 건강·영양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의

식품영양정보전달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영양정책에 대한 홍보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식품영양정보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양교육 및 식품영양정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소비자 대상별로 보다 세분화된 최신의 식품영양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영양정책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식품안전정책에 있어서도 식품위생안전(Food Safety) 뿐만 아니라 응용영양(Applied Nutrition)분야의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에 영양학회도 국가식품영양정책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